한은, 11일 기준금리 '동결' 무게

6월 금리인하 · 추가경정 효과 확인 후 대응… 추가 인하, 오는 9~10월 이뤄질 전망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선다.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데 이어 7월에도 이를 유지한 바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 당분간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2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지난 6월 단행한 금리인하와 추가경정 효과를 확인한 후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미국의 9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데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우려하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낸 점 등도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하반기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은이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국내 경기 하방위험 확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을 근거로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또 추경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에 맞춰 경기 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공조 수단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에 그치며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은이 앞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릴 정책적 요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이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8월보다는 오는 9~10월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내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구체적 시기로 10월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을 재개하고 연준은 12월 전까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또 하반기 국내 인플레 압력도 매우 미약하고 국제유가 하락과 원화 강세 등의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 이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9~10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오는 8~9월 금통위에서 추가로 기준금리가 1.00%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리우에서 5G 리포터 운영 KT가 지난 4일부터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최초 5G를 홍보하기 위한 5G 리포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리우의 주요명소인 마리카나 주경기장 건너편 마리카타 역에서 현지 주민들과 5G 리포터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활개'

수사 의뢰 1년 전보다 64.1%↑… 신고건수는 3.5배 늘어

저금리 · 저성장 기조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수사당국에 통보한 유사수신 사례가 69건으로 1년 전보다 25건(64.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건수는 298건으로 3.5배 가까이(211건) 불었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 · 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40%에 달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았다.

최근에는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속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하거나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제보하면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상장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권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기관투자자 의결권 내역 공시"

앞으로 상장사들은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들은 상장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내역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CGS)은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모범규준'을 지난달 26일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제정됐으며,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모범규준 준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2003년 감사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1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국내 기업지배구조 소관법이 증권거래법에서 상법으로 변경되고, 지난해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협력기구(OECD)가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개정하는 등 2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즉, 최고경영자 승계 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 권한 · 책임은 물론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시 혹은 퇴임시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

'임원 보수정책의 마련 및 공시' 원칙을 신설해 보수정책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거래내역을 절차에 의해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기관투자자 섹션도 마련됐다.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규정을 제정해 공표하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주권 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법에서 '2주 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 전'으로 바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는 '28일 전'에 통지하고 있다는 점을 단서로 담았다. /뉴시스

수익추구 성향에 보호대상 예금 증가폭 둔화

전 분기 대비 부보예금 증가폭 다소 둔화… MMF 등 비보호금융상품 잔액 늘어

저금리 기조에 수익추구 성향이 강해지면서 전 분기 대비 부보예금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

부보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정기 예 · 적금, 요구불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뜻한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8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과 보험회사 등 전체 금융업권의 부보예금은 178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 2.1%(37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보예금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3.0%, 3분기와 4분기는 모두 2.9%를 나타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호 대상 상품들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인데, 저금리의 영향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상품으로 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금전신탁, 투자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보호금융상품의 잔액이 늘었다.

채권형 투자펀드의 순자산총액은 2013년 78조5000억원, 2014년 99조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115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 1분기는 12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환매조건부채권(RP)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비보호금융상품의 잔액 규모도 불렸다.

RP 발행잔액은 지난해 1분기 96조6000억원에서 올 1분기 108조7000억원으로 12.5% 늘었다.

동기간 ELS와 파생결합사채(ELB) 발행잔액도 58조4000억원에서 66조1000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금융자산도 꾸준히 늘어 개인보험(생명보험)과 장기상품(손해보험) 관련 부보예금도 지난해 4분기 477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8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장기상품의 규모는 99조4000억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상반기 중 신규 편입된 부보금융상품으로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변액 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이 있다. 다만 ISA 편입 상품 중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뉴시스